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자	교육위원장
제안연월일	2023년 11월 20일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3년 11월 20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주문

- 정부의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2023. 7. 28.)’에 따라 교육부·교육청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실효성 있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교육부·시도교육청 중심의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정부는 2023년 1월 30일 “출생부터 국민 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유보통합 청사진을 발표하고, 이어 지난 7월 28일에는 ‘아동 돌봄 업무의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 그러나 아직 유보통합과 관련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아 중앙정부 차원의 유보통합 관리체계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고,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현실적인 세부 추진계획이나 지침이 부재한 상태임.

- 현재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원화된 관리체계에서 유보통합이 추진되다 보니 기관 간 다양한 쟁점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 유보통합 정책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추진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에 따라 유보통합 정책 추진과 행·재정적 처리의 관리체계 일원화가 우선적으로 확립되어야 함.
-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현행 보건복지부 장관 영유아보육 사무를 교육부 장관 사무로 통합·이관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교육부·시도교육청 중심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를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함.

3. 붙임: 건의안

4. 이송처: 대통령실(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교육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정부는 지난 1월 30일 “출생부터 국민 안심 책임 교육·돌봄” 실현을 위해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1단계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 해소 및 행·재정 통합 기반 마련과 2단계 교육부·교육청 중심의 유보통합 본격 시행 전략을 핵심으로 하는 유보통합 청사진을 발표하였다.

이어 지난 7월 28일에는 ‘아동 돌봄 업무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일원화 1단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보육 업무를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지방 단위의 일원화 2단계, 그리고 교육부·교육청 통합모델을 적용하는 3단계 일원화 체계가 2023부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정부가 유보통합 정책 방안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지만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조직법」 제28조 및 제39조에 보건복지부의 사무 중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 사무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요구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된 행정체제로 인하여 현재 유보통합 정책은 지지부진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현실적인 세부 추진계획이나 구체적인 지침이 부재한 상태이다 보니, 영유아 교육과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는 예산과 인력 등 행·재정적으로 다양한 쟁점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유보통합 정책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추진과 영유아보육 및 교육 현장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의 유보통합 일원화 관리체계가 조속히 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영유아보육법」과 「아동복지법」 등 유보통합 관련 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영유아 교육·돌봄 국가 책임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현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164만 충북도민과 함께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첫째, 국회는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둘째, 정부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중심의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라.

2023. . .

충 청 북 도 의 회